

# 담뱃갑 절반이상 '폐암 경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내년 12월 그림·문구 교체 '50→75%'

### 거꾸로 진열·개폐부 젖히기 등 편법 억제

내년말부터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성기능장애 등 담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 크기가 담뱃갑의 절반 이상으로 커져 50%인 경고 그림과 문구 면적이 75%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과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면적을 현재 담뱃갑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키로 했다. 문구 크기는 지금처럼 20%로 두고 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키우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2016년 12월 도입했지만 전체 면적 절반에 불과해 이를 가리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편법 행위가 만연했다. 그림 및 문구를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 소매점 관찰 결과 30%가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해 제품 이름표로 경고 그림을 가렸다. 개폐부에만 그림이 표기되는 점을 이용, 아예 개폐부를 젖혀 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이 제작되기도 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경고 그림을 문구와 함께 표기하면 금연(2.69→3.74)과 흡연예방(2.9→4.03)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CT)에선 면적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경고 그림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한국은 28위 수준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앞·뒷면 평균 82.5%이며 캐나다 75%에 달한다. 여기에 벨기에, 영국 등 22개국은 65%다. 경고 그림을 부착한 118개국 가운데 15개국은 75% 이상이다.

경고 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교체 주기(2년)를 맞는 2020년 12월에 맞춰 시행된다.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는 담배 판매업소 불법 광고 행위를 확대된다.

현재 전국 1149명의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장 위촉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불법 행위 단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외부에서 담배 광고내용이 보여진 안되며 광고에서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 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고 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 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시원한 입수 올 여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교사 부정 채용 학교법인 상대 市보조금 반환 소송 각하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광주시가 학교법인 N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결합보조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심은 "N학원은 광주시에 8억2155만4920원을 반환하라"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에 보다 간이하고 경제적인 절차인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지 않고, N학원을 상대로 재정결합보조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N학원의 분안

전 항변은 이유있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N학원은 분안 전 항변을 통해 "광주시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직접보조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N학원이 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당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해도 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

단이다. N학원은 교사 6명을 임용했지만 광주시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에 따라 임용을 취소했다. 채용대가로 N학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해당 교사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해당 교사들의 근무 기간 동안 N학원에 지급한 인건비와 기관 부담금 등 재정결합보조금은 8억2155만4920원이었다.

광주시는 사립학교법(제43조)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재단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 광주·전남 폭염특보 확대

광주·전남 지역의 폭염특보가 확대됐다.

광주기상청은 29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나주·광양의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하고, 여수·무

안·장흥·해남·강진·보성 등 전남 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영광·함평·영암·장성·곡성·구례·담양·화순 등

지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유지 중이다.

기상청은 연중 이틀 이상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일 때 폭염 경보를 발효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 '전남 옛 농악고깔' 3곳만 전통유지

### 무형문화 보존 시급

최근 베트남 전통 모자를 쓰고 전통 들노래 공연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 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악대 고깔을 조사한 결과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허복구 국장에 따르면 농악은 공동체 의식과 농촌 사회의 여흥 활동에서 유래한 대중적인 공연 예술의 하나이다. 한민족 전통문화 유산인 농악은 지난 2014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했다.

전남에는 '구례 잔수농악'이 국가 무형문화재 제11-6호로 지정된 가운데, '화순 한천농악', '영광 우도농악', '고흥 월포농악', '곡성 죽동농악', '진도 소포결군농악'이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같이 전남 주요 지역마다 농악대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농악대 고깔이 전승되고 있는 곳은 '진도 소포결군농악', '구례 잔수농악', '담양 우도농악'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각 지역별 농악대 고깔을 조사한 허복구 박사는 "전남에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모란꽃·나팔꽃·담배꽃·접시꽃·벌꽃·간꽃 등 지역 마다 마을에서 다양한 지화(紙花·종이로 만든 꽃)를 만들어 농악 고깔에 이용할 정도로 개성과 특색이 넘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도 전통 무형문화 전승과 지역 특색에 맞는 농악 고깔 개발 차원에서 지역별로 전통적인 고깔에 대한 조사와 복원·전승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하고 지역별 특색을 이용한 고깔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이런판결 저런판결**

### 광주고법 "수업시간 중 도박사이트 접속 교사 해임 적법" 항소기각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 요구"

수업 또는 근무시간 중 불법 사이트 접속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한 초등학교 교사의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교사 A 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어린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 직업인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여러 사정들에 비추보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남도 교육감은 A 씨가 2017년 4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교과전담 수업 시간과 방과후학교 일부 시간 중 수업과 관련이 없는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 16개의 불법 사이트에 장시간 접속하는 등 수업을 전념해야 할 교사로서의 직무를 게을리 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해임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수업 시간 변경으로 자신의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뤄진 불법 사이트 접속행위도 수업 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실제 도박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업 시간 중 교무실로 돌아와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중에도 학생들 앞에서 틈틈이, 때로는 수업 시간의 절반인 20분 이상 접속하기도 했다.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해임처분은 A 씨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도박행위로 2016년 검찰로부터 불구속 구공판(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유 등으로 2016년 전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찌 일찌 해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할 수 있는 항목은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임신기간이 혼란하시거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건강 IN  
신뢰한 정보,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체조사할 수 있는 항목은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